



대학정책 구조와 지방대학의 활로

송용호 | 충남대학교 총장

1978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부터 충남대학교 건축과 교수로 근무하였고, 1999부터 2000년까지 충남대학교 교수회장을 지냈으며, 2008년 1월 충남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현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대전·충남지역총장협의회 공동의장, 국립거점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 정부의 대학정책 구조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을 갖고 있으니 '자율과 경쟁', '평가와 공시', '교육기회의 균등'이 그것이다. 먼저 '자율과 경쟁'을 지향하고 있는 사업들에는 대학자율화의 추진과 포괄적 보조금으로서 "우수인력양성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NURI 사업은 "광역 경제권 선도산업 인력양성사업"으로 바뀌어 광역 내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WCU 사업(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도 경쟁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립대 법 인화 추진과 국립대학 재정회계특별법 제정 추진, 국립대학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등은 모두 국립대학 사회에 자율과 경쟁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평가와 공시' 지향 차원에서 대학평가체제의 강화와 대학정보공시제의 시행이 이뤄지고 있다. 대학별 자체평가체제

가 제도화되었고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설립이 추진 중이다. 현재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내의 '대학평가원'이 평가인증기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대학정보공시제의 시행으로 교육·연구·재정 분야의 각종 지표와 대학자체평가 결과를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기회의 균등'을 지향 차원에서는 대학등록금 상한제의 입법화가 이뤄졌고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어 강화되고 있다. 또한 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하는 제도로서 "돈돈 학자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작금의 경직되고 균분지향적인 국립대학 체제에 많은 변

화를 가져올 것이다. 사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글로벌 경쟁은 격화되고 있고 중국의 G-2 부상과 함께 경제적 불확실성은 높아져가고 있다. 이때 우리의 국가수준에 맞는 글로벌 대학을 최소한 몇 개라도 만들어낼 당위가 주어진다. 특히 UN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G-20 정상회담을 주재할 정도가 된 우리나라이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수도권 위주로 대학서열이 구조화되어 버린 지금, 지방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자율과 경쟁'에서의 문제점인데, 대학자율화의 갈래인 편입 등을 통해 서울권 대학에 학생이 더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WCU 사업으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둘째, '평가와 공시'의 문제점을 들자면, 대학정보공시로 열악한 여건의 지방대학은 더 취약해지는 빈곤의 악순환 고리가 강화되고 있다. 셋째, 대학등록금 상한제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인상률 규제로 되어 있다. 그것은 곧 현재 등록금이 낮은 대학과 높은 대학의 등록금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담고 있으니 '교육기회의 균등'에서의 문제점인 셈이다.

도시체계는 수위(首位)도시, 상위권 도시, 중위권 도시, 하위권 도시로 나뉘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에 따를 때, 이들 간의 자

원분포가 항아리형일 때 전체적인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다. 여기서의 자원은 인구와 자본, 기술력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시체계가 심각한 역삼각형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수위도시에 50% 이상이, 또 소수 상위권 도시에 나머지 30% 정도가 몰려 있다. 이런 역삼각형 구조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위도시권에서 혁신이 가속화되고 효율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전체 도시체계로 제대로 전파되지 못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극복하고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수위도시가 아니라 상대적인 상위권 도시와 중위권 도시의 자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현 정부의 대학정책은 지나치게 수도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필자는 판단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비수도권의 중소도시에 소재한 명문대학이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권 이외 지역의 상위권 도시와 중위권 도시에 소재한 지방대학에게,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